

1. 전자민원G4C 소개

전자민원G4C 사업 개요

인터넷, 휴대전화, PDA, 케이블TV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함으로써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 추진경과

민원서비스혁신(G4C)을 위한 BPR/ISP 사업

2000.11 ~ 2001.05

• 이용 빈도가 높고 전자적 처리 가능한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419종 민원 발굴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 구축 사업

2001.11 ~ 2002.12

- 전자적 민원 처리를 위한 단일창구 구축 (민원안내 4,400여종, 신청 393종, 열람 20여종)
- 전자지불, 본인확인, 전자서식 등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

2003.06 ~ 2003.12

• 주민등록등•초본 등 8종의 민원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화 및 발급문서 확인을 위한 문서확인 시스템 구축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 확대를 위한 BPR/ISP 사업

2003.09 ~ 2004.05

- 단일창구 재설계를 통해 국민 활용도 및 편리성 제고 방안 마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 확대 1단계 구축 사업

2004.12 ~ 2005.09

- 서비스 대상확대 (신청 430여종→ 526종, 발급 8종→ 20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시행
-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 모바일 전자정부(M-Gov) 시범서비스

전자민원서비스(G4C) 확대 2단계 시스템 구축 사업

2006.01 ~ 2006.08

- G4C 대상 민원사무 확대 (526종 → 591종), 보안기반 강화
- TV 전자정부 시범 시스템 구현 (시범기관: 서울 강남구)

전자민원G4C 확대 3단계 시스템 구축 사업

2006.10 ~ 2007.05

- 전자민원서비스의 유형별 서비스 대상확대
- 본인신청•타인발급 구축, 주소변경 알리미기능 구축 등

전자민원G4C 장비교체 사업

2007.09 ~ 2007.12



■ 구축 배경 및 필요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민원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요구 수준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국가행정에서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전자정부"의 등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이에 보다 편리하고 쉬운 민원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위해 전자민원G4C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자민원G4C의 컨텐츠 확대 및 기능 보강

- 민원인이 자주 찿는 민원에 대한 온라인신청. 열람.발급 서비스 확대
- 전자민원G4C 시스템과 개별전자민원창구간 연계체계 강화
- 전자민원G4C 시스템의 전반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기능 보강

전자민원G4C 역할 및 서비스 확대 필요

서비스 이용 활성화

행정업무 효율향상

공통기반 서비스 지원



■ 기대효과



국민의 편리성 측면 -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통합전자민원창구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요 민원의 신청이 가능하여 굳이 행정기관이나 대행사를 찾을 필요 없이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직접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열람•발급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980여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구비서류가 감축되어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부담이 감소된다.

행정업무처리의 효율화•투명화 측면

행정기관 간 자료를 공동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하여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따른 비용이 줄어들고, 제 증명 발급을 담당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은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에 좀더 충실하게 되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 짐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기관의 중복투자 방지

전자정부 단일창구 및 각 기관별 전자민원시스템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기반 확보, 기존 인프라 공동활용 극대화,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계방식 제공으로 전자정부 전산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